

특별기고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시작하는 새해 영농설계

김 행 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으로, 붉은색과 불의 기운을 지닌 병(丙)과 말을 상징하는 오(午)가 만나 '붉은 말의 해'라 불린다.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전남 농업이 다시 한번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일수록 출발선에 선 자세가 중요하다. 2026년의 영농 설계는 단순한 한 해 농사의 계획을 넘어, 전남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지난 한 해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력난, 생산비 상승과 유통환경 변화는 물론 폭염과 집중호우, 깨끗한 병 등 병해충 확산까지 겹치며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농업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고, 농업인의 체감 부담 또한 적지 않았다. 기후와 시장, 정책 환경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농업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위기는 곧 기회의 시작이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인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충분히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2026년 역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서리·우박 피해와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는 더욱 잦아지고 있으며,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식량안보 강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과 미래 대응 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농업 구조 전환까지 염두에 두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기후위기 대응 병해충 사전 예측과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전남형 신제품 육성·신재생에너지 활용·작물 생산 표준화 기술 개발, 그린바이오·푸드테크 기반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화,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전남 농업의 체질을 미래형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다. 기술은 농업인의 손에 닿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 개발과 견증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 보급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연구와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농기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신속히 수렴해 연구과제와 기술보급 방향에 반영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검증된 기술만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밭과는, 축사와 과수원에서 농업인과 함께 만들어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인 역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영농 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농업은 생산 중심을 넘어 경영과 유통, 마케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도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월 말까지 농업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로운 재배기술과 농업정책을 공유하며, 한 해의 영농설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번 교육은 영농기술·농촌자원·농업경영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식량작물·제초·과수·특작·죽산·친환경 등 품목별 핵심 배지기술과 신작목 교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병해충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온열질환 예방, 공의직불제 등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교육 전·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동영상 상영과 영농부산물 파쇄기 안전 사용 등 농기계 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해 농업 현장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과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살린 품목 육성과 브랜드화, 농촌자원을 활용한 응복합 산업 발굴을 통해 전남 농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 농업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많은 농업인이 함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길 바란다. 2026년이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약의 방향을 그려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민을 위한 3가지 제언

박필순



광주시의원

광주와 전남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앞에 섰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수도권 일각 체계의 불행이 지방의 모든 것을 빼앗아들이는 지금, 우리는 봄길을 키워 대향마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초광역권 전략과 맞물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도 확인되었다. 2026년 7월 통합 광역정부 출범이라는 목표를 향해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는 지금 백년대계를 좌우할 갈림길에 서 있다. 진정한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통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통합이 성사되면 인구 320만 명, 예산 규모 20조 원이 넘는 초거대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한다. 막강해진 통합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하지만 현재의 의석 분포는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다.

전남도의원 61명 대 광주시의원 23명이라는 현재의 구도 통합의회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광주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통합 후 실질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광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전남 인구 177만, 광주 인구 139만이라는 인구 비례를 반영하는 의원 정수 비율 조정안과 광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둘째, 광주 자치구의 위상 강화와 도시 경제성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광역 통합, 기초 유지' 모델 하에서는 자칫 광주라는 도시의 고집성이 사라지고 5개 자치구로 파편화될 우려가 있다. 광주는 역사적 으로나 기능적으로 하나의 거대 생활권이자 유기적인 도시 공간이다.

하지만 통합 이후 광주광역시 없이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이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되면, 광주 전체를 이우르는 도시 계획과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광주의 구정장이 군수 수준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통합 정부 산하에 '광주특별시'를 두어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살리고, 광주의 경제성을 지키면서도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셋째,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현재 불리적 시간 부족과 비용 문제를 들어 시·도의회의 의결로 주민투표를 갈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다. 만약 현실적인 여건상 주민투표 실시가 정녕 어렵다면,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심층적인 대시민 설명과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책을 알리는 홍보를 넘어 통합의 실익과 우려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시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사상각에 불과하며, 향후 정통성 시비와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에 남을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모처럼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판을 깔아주었고, 광주와 전남 양측 단체장이 맞손을 잡았다. 이 기회가 진정한 지역의 대부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체의 '속도'이자 '방향'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준비 부족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지역 소멸의 파고 앞에서 역사가 진보하는 측에 설 것인가. 아니면 도태되어 후퇴하는 길로 향할 것인가. 그 운명은 지금 우리의 치열한 준비와 결단에 달려 있다.

취재수첩

달라진 경제형별, 기업 숨통 트일까

송 대 응



산업부 차장

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 경영의 밤묵을 잡아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순 행정 실수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며 기업 현장에서는 '경영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규제에서 나온다'는 하소연이 반복돼 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은 규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

형별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의 성격과 과실에 따라 제재 수단을 달리하고, 억지로는 형량이 아닌 경제적 부담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즉각 처벌'에서 '시정 우선'으로의 전환이다. 그간 형사 처벌이 앞섰던 영역에서 시정명령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형별을 병과하는 구조로 제도가 재편됐다. 실수와 고의, 경미한 위반과 구조적 불공정을 구분하겠다는 메시지다.

과징금 상향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단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처럼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물도록 했다. '처벌을 줄인다'기보다 '아프게 때릴 곳을 정확히 짚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 정보보호, 지주회사 규제 등 그동안 형별이나

시정 조치에 머물렀던 영역에 과징금을 도입하거나 상향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형사 처벌로는 체감도가 낮았던 규제에 경제적 책임을 결합,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규제의 방식이 '사법적 판단'에서 '경제적 판단'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경제제가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사 리스크가 완화되면 경영 판단의 숨통은 트일 수 있다. 다만 수십억 원대 과징금이 중소·중견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제재의 강도만큼이나 적용 기준과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해진 이유다.

결국 관건은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다.

시정 기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과징금이 합리적 기준 아래 집행될 때 비로소 '형별 만능'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규제를 푸는 실험이다. 아니라, 규제를 제대로 쓰기 위한 시험대다.

사설

GGM,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역 희망돼야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극심한 취업난과 겪는 지역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추세가 이어지는 새해 벽두부터 50여명의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GGM이 지난해 캐스퍼의 국내외 판매 호조로 5만8400대를 생산하며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전기차·수출차 생산을 늘려 지난해보다 4.8%(2800대) 증가한 6만12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2억 원을 투입해 설비 증설 공사와 함께 인원도 추가로 필요해 이번 공채에 나선 것이다.

광주 시민과 차치단체, 그리고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지난 2019년 9월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기업인 GGM은 그동안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2021년 9월부터 '캐스퍼' 생산체계에 돌입, 2021년 1만2353대,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29대, 지난해 5만8400대 등 누적 21만8782대를 생산했다. 매년 생산량이 늘면서 일자리도 당달이 많아져 2021년 555명이었던 직원은 지난해 706명으로 증가했고 이번에 50여명이 추가될 경우 5년새 200여명이 늘게 된다.

무엇보다 눈에 띠는 것은 직원 90% 이상이 광주·전남 출신이라는 것과 20~30대 젊은층이 85%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 2021년 3100만원에 불과했던 기술직 평균 연봉도 지난해 4900만 원으로 크게 높아져 구직난과 저임금 구조에 애가 타는 지역 청년들의 '최애 지역기업'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하반기 공채에 각각 33명, 27명을 뽑았는데 평균 경쟁률이 상반기 26대1, 하반기 36.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올해 2교대 전환 근무 무산으로 최소 4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 챙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GGM은 앞으로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노사가 대타협하는 지속 가능한 강소형 기업이 돼야 한다.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는 얘기다.

광주 착한가격업소 유지하기 힘들다는데…

저렴한 가격에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앞던 '착한가격업소'들이 요즘 너무 힘들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손님마저 뜸하면서 더 이상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와 가격 안정을 실천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한 환경,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이미용·세탁업·목욕업·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역 평균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위생·청결 기준 만족, 지역 화폐 기관점이나 지역사회 공원도 등 기준을 충족한 영업자가 신청하면 적격 여부 평가·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12월 현재 동구 50개소, 서구 65개소, 북구 106개소, 광산구 87개소 등 총 371개소가 지정돼 있고 이중 외식업계가 249건으로 67.1%나 차지하고 있다. 이를 업소는 그동안 일일 업종 가격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 안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식당들이 더 이상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음식 가격 결정의 중요 요소인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해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착한 가격업소'를 포기하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9%,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3%)에 비해 0.6%p 높았고 최저 임금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전년